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에서의 의미와 과제*

홍용표**

| 국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평화문화' 개념의 내용, 한계와 성과 등을 분석하며, 평화문화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평화 문제를 살펴보고 평화문화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평화문화는 평화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존중, 양성평등 보장, 민주적 참여의 확대, 이해·관용·연대 촉진, 참여적 소통, 국제적 평화와 안보 증진 등을 통한 평화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특히 평화문화 개념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정체성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평화를 인간의 일상에서부터 증진시키고자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분단이라는 특수성과 냉전문화의 영향으로 평화 문제에 대한 편협한 인식,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대립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평화문화의 개념과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사회에 대한 적실성이 있다. 첫째, 6.25전쟁의 아픔과 여기서 비롯되어 구조적 폭력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냉전문화의 상처 치유; 둘째, 관용·이해·협력 같은 가치와 보다 조화로운 사회정체성 형성을 통한 배타적·이분법적 문화 개선; 셋째, 포괄적·문화적 접근을 통한 평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협한 시야 확대; 넷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환경조성 등이 그것이다.

■ 핵심어: 평화문화, 가치, 정체성, 한반도 평화, 냉전문화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3970).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yphong@hanyang.ac.kr, 논문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 들어가는 말

평화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평화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평화는 시대적·공간적 상황에 따라, 또는 사용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평화연구의 대가인 볼딩(Boulding 1978)이 “평화라는 말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할 정도다. 실제 2000년 이후 제목에 평화(peace)가 포함되어 있는 영문 논문을 분석한 결과, 40여 개의 서로 다른 의미로 평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현실에서도 평화는 수준(개인, 국가, 세계), 방향(대내, 대외), 지속성(불안정, 안정), 조건(힘, 민주주의, 경제), 형태(소극적, 적극적), 범위(지역, 세계) 등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Coleman 2012, 354).

다양한 기원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평화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 유럽을 중심으로 평화연구가 확산되면서부터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다. 갈통(2000)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전쟁, 사형과 같은 ‘직접적(물리적) 폭력,’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같은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인 ‘문화적 폭력’ 등 폭력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갈통은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규정하였으며, 평화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이 발전하면서 ‘적극적 평화’ 개념을 현실 세계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확대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평화문화(culture of peace)’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구상은 1989년 코트디부아르의 야무수크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인간 마음속의 평화에 관한 야무수크로 선언(Yamoussoukro Declaration on Peace in the Minds of Men)”은 “생명에 대한 존중, 자유, 정의, 연대,

김으로써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세워 나가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UNESCO 1989). 이후 평화문화 프로젝트가 UNESCO의 공식 사업으로 채택되고, 1999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평화문화는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UNESCO와 평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평화문화 개념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¹⁾

평화문화는 그 개념이 너무 방대하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화문화 개념은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 보다 행복한 인간의 삶에 기초해 사회·국가·세계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평화연구에서 제시한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UN 등을 통해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리고 개인의 참여를 장려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문화와 유사하게 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에 비해 평화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평화문화 개념의 학문적·정책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 학계에서는 평화문화 개념이 일부 소개되었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평화문화를 주제로 다룬 논문들도 대부분 UNESCO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기 개념을 다루고 있을 뿐, 이후 발전된 평화문화 개념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한반도에서의 적용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평화문화 개념의 발전과정과 구체적 내용, 평화문화의 한계와 성과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평화문화

1) 평화문화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UNESCO(1995; 1996), Adams(2000), Boulding(2000), de Rivera(2004; 2009), Basabe and Valencia(2007), Fry and Miklikowska(2012) 등이 있다. 평화문화 개념의 발전 과정은 다음 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2) 김귀옥(2006), 변종현(2017), 서보혁·정육식(2016), 이문영(2013), 조민(2000), 조한범 외(2004), 전성훈 외(2005) 등 참조.

개념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한국에서 평화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평화문화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평화 문제를 살펴본 후, 한국에서 평화문화의 적용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평화담론이 분단이란 특수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그 논의의 범위가 편협하고, 이분법적 논리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평화문화 개념의 적용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자 한다.

II.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문화 논의

문화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행동은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은 물론 그 폭력에 대한 대응 방식 역시 인간의 행위이며 따라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Richerson and Boyd 2005, 3; 조민 2000, 9).

평화문화 개념 확립에 큰 역할을 한 볼딩(Boulding 2000, 1)은 평화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지향적” 개념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상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인식, 환경, 행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평화도 문화의 영향을 받는 행위임을 시사하고 있다. 평화문화 구상의 시발점이 된 ‘야무수크로 선언’ 역시 폭력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동이 숙명적으로 폭력적이지도 않다”는 ‘폭력에 관한 세비야 선언’을 지지하며, 세계 곳곳의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³⁾ 평화문화론자들은 이러한 논리를

3) 1986년 전 세계 20명의 과학자들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 전쟁이 인간본성의 일부가 아니라는 “폭력에 관한 세비야 선언(Seville Statement on Violence)”을 발표하였다(www.culture-of-peace.info/vita/2011/seville2011.pdf). 이 선언은 인간이 동물적 본성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며, 폭력적 행동이 인간본성에 유전자

통해 “전쟁을 만든 바로 그 종(species)이 평화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Adams 2003).⁴⁾

이러한 맥락에서 1992년 개최된 UNESCO의 ‘평화문화에 대한 국제 포럼’은 평화는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평화문화는 인간관계에 내재된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실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갈등이 폭력적 파괴로 불거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UNESCO 1995, 16-25). 이후 이러한 인식은 역사 이래 문명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전쟁문화(culture of war)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문화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UNESCO 1996, 251-254).

평화문화 개념은 UN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1999년 ‘평화문화에 대한 선언’과 ‘실행계획’이 UN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우선 ‘선언’은 평화문화가 ① 교육,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한 폭력의 중단과 비폭력의 실천, ② 인권과 자유, 발전권, 남녀평등의 증진, ③ 갈등의 평화적 해결, ④ 국가의 주권, 영토적 통합 그리고 정치적 독립 등을 존중하는 “가치, 태도, 전통 그리고 행동과 생활양식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UN 1999a). 아울러 ‘실행계획’은 평화문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8개 분야에서의 실천 목록을 제시하였다(UN 1999b):

- (1) 교육을 통한 평화문화의 장려: 갈등 방지, 인간의 존엄성과 관용, 차별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갈등해소 이후 평화건설에 대한 교육
- (2)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 추구: 빈곤 퇴치, 경제·사회적 불평등

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비록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만, 자연 상태에서 같은 종 사이에 무기 같은 도구를 이용해 파괴적인 집단적 싸움을 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선언은 전쟁의 양상과 빈도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은 “전쟁이 문화의 산물”이며, 따라서 “전쟁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4) 아담스(David Adams)는 UNESCO의 평화문화 개념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홈페이지에는 평화문화의 발전 과정과 관련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 감소, 식량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노력
- (3) 인권 존중: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을 확산하고, 발전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
 - (4) 양성평등 보장: 정치·경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며, 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 강화
 - (5) 민주적 참여 확대: 공공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훈련과 능력개발을 통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 장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평화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테러리즘, 조직범죄,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 (6) 이해, 관용, 연대의 고취: 사회 내의 취약집단, 난민, 이주민에 대한, 그리고 민족 및 국가 사이 또는 그 내부에서의 이해, 관용, 연대 모색
 - (7) 참여적 소통과 자유로운 정보 및 지식의 흐름 지원: 평화문화의 증진에 있어 미디어 역할 존중, 표현과 정보의 자유 보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공유 노력
 - (8)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 군축, 신뢰구축 장려, 전쟁에 의한 영토 획득 불용, 불법적 무기 생산 및 거래 금지, 분쟁 중지 이후의 제반 문제 해결,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의 독립과 통합성을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강압적 행위 중지,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고려 등을 권고

이와 같은 평화문화에 대한 논의는 인간다운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de Rivera 2004; Bjarnegard 2015). 인간안보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안보는 “사람 중심적”이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면 세상

은 평화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안보는 “무기가 아니라 발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로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그리고 정치적 안보를 거론하였다.⁵⁾

평화문화론자들은 인간안보 개념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지만, 사람들이 속해 있는 시민사회 및 문화의 조건을 다소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평화문화론자들은 안보는 넓게 정의되는 경우에도 평화의 여러 측면 중 하나일 뿐이며, 따라서 인간안보가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평화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평화문화가 보다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de Rivera 2004, 535).

하지만 평화문화 개념이 인간안보 개념과 유사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안보 개념은 안보연구의 영역을 확대하였고 다양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그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학문적, 정책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또한 인간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인간안보는 국가주권의 약화를 전제로 하였고, 이로 인해 개별 국가들은 인간안보 개념의 수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주권과 타협하여 인간안보를 국가주권과 양립 가능한 개념으로 변형시켰다. 나아가 인간안보는 국가안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며, 국민 개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면 그것은 국력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전웅 2004; 이해정·박지범 2013).

평화문화 개념에 대한 비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평화문화 개념도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앞서 평화 개념의 다양성을 지적하였지만, 문화도 평화만큼이나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⁶⁾ 따

5) 인간안보는 안보의 개념을 국가 및 군사적 차원 중심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안보의 대상을 개인, 세계 수준으로 넓히고 안보의 영역도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비군사적 문제로 확대하려는 연구 동향의 일부분이다. 안보 개념의 확대로 안보학과 평화학은 수렴되고 있으며, 특히 인간안보 개념은 안보학과 평화학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평가받는다(김명섭 2002; 홍용표 2002; 민병원 2006; Buzan 1991).

라서 그 두 단어를 합친 평화문화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볼딩(Boulding 2000)은 평화문화는 “평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라고 정의한다. 일면 매우 단순한 정의이지만, 과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1999년 UN의 결의안으로 채택된 ‘평화문화 실행계획’도 인권, 민주적 참여, 군축 등 인간의 삶과 사회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담고 있어 학문적, 정책적 응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행히 평화문화론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평화문화 개념의 현실 적용 가능성 및 분석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e Rivera 2004; Baasabe and Valencia 2007).

둘째,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평화는 힘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평화문화가 모순적 개념이라고 비판한다(de Rivera 2004, 537). 실제로 1999년 평화문화에 대한 UN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강대국들이 이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특히 현재 전쟁문화가 존재한다는 평화학자들의 의견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협의 과정에 참여한 아담스(Adams 2000; 2003)에 따르면 강대국들 자신이 힘의 유지를 위해 전쟁문화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전쟁문화의 개념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결국 최종 결의안은 애초 제기된 구상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으며, 특히 전쟁문화의 존재와 관련된 대부분의 표현이 문안에서 빠졌다. 또한 일부 강대국은 평화 문제가 인권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데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인권안보 개념에 대한 논란과 마찬가지로 국가주권의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결국 UN이 채택한 “평화문화에 대한 선언”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6) 영국 문화연구의 대가인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문화를 가리켜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것들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으며, 18세기부터 20세기 사이 내려진 문화의 정의만 16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이문영 2013, 575).

셋째, 갈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평화문화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지적도 있다. 평화문화는 “폭력적 경쟁을 공동목표를 향한 협력으로 변화” 시키고자 한다(UNESCO 1995, 19).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힘과 지위를 향유하고 있으며, 힘과 지위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폭력의 제거와 대화 및 협력을 통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de Rivera 2004, 546).

평화문화론자들도 힘의 정치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중요한 문제는 정치학자들과 정치 행위자들이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느냐이다. 여기에는 개념적으로는 우월적 힘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방법, 정당성에 근거한 힘 또는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비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힘의 사용 방법이 혼재되어 있다. 다만 평화문화 개념은 물리력의 사용보다는 “비폭력적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Summy 2009).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화문화 개념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개인의 차원, 즉 아래에서부터 증진시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을 통한 ‘자기 초월적(Self-transcendence) 가치’의 장려는 사람들의 평화 지향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가치는 어떤 행동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판단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가치는 그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Fry and Miklikowska 2012). 가치와 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쉬운’ 문제 — 즉 친숙하고, 결과 지향적이고, 상징성이 큰 문제일수록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Pollock et al. 1993, 30). ‘평화로운 삶’과 같은 문제는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평화에 대한 태도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Fry and Miklikowska 2012). UN의 ‘평화문화 실행계획’이 타자에 대한 관용, 이해, 협력, 연대 등과 같은 자기 초월적 가치의 확산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평화문화는 일상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과 집단 사이에 ‘우리’의식을 확장하는 사회 정체성을 육성함으로써 비폭력적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집단 간의 갈등은, 영토·자원·특권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 정체성과 같은 문화적·심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 정체성과 갈등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갈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 욕구가 좌절되고 그러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개인 정체성 대신 집단 정체성을 택하여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집단 동일화는 적대감과 폭력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다. 집단 동일화는 우리와 타자의 구분을 가져오고, 종종 자기가 속한 집단이 타자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희생 인식은 당연한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와 비현실적 평가로 이어진다. 나아가 갈등이 고조되면 내집단(in-group)은 외집단(out-group)에 대해 점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결국 외집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며, 이는 폭력 사용의 정당화를 가져온다(Fry and Miklikowska 2012, 231-232).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평화문화 개념과 UN의 ‘실천계획’이 강조하고 있는 난민, 이주자, 취약계층 등 사회 내 소수 집단 간 연대의 강화,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한 소통의 확대 등은 집단 간 사회 정체성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평화문화 확산이라는 목표 자체가 포용적인 사회 정체성 정립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가치와 정체성 문제는 평화를 위한 개인과 정부, 사회와 국가의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문화적 접근에서 가치는 지도자와 국민들 모두에게 있어 행동의 길잡이가 될 원칙을 제공한다. 아울러 문화는 대중적 성향과 관념은 물론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념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문화 개념은 시민운동과 정부의 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다. 또한 개별 집단의 목표가 아닌 상위목표를 추구할 경우 정체성 갈등이 줄어들고 협력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Fry and

Miklikowska 2012, 233), 평화문화 개념은 민주주의, 양성평등, 인권,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동 등 현대의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대성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목표를 제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de Rivera 2009).

III. 한국에서의 평화 논의와 평화문화

우리말의 ‘평화(平和)’라는 글자를 풀이하면 ‘평(平)’은 평등, 평균과 같이 ‘고른’, ‘곧고루’를 의미한다. ‘화(和)’는 화합, 조화 등의 표현에 쓰이듯이 ‘어울림’의 뜻을 갖는다. 따라서 평화는 말 그대로는 “곧고루 어울린다.” 의미를 부여하면 “모두가 아무 장애 없이 조화로움을 이룬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유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교에서 화평(和平)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개인과 사회, 자연의 모든 사물, 사건들이 평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최관경 2004). 우리가 흔히 쓰는 평화라는 말에는 이미 ‘평화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조화로운 인간의 삶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논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보다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평화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분단 극복 차원의 통일과 관련된 평화 논의와 분단관리 차원의 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평화 논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이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우리사회에서 평화는 통일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평화통일에서 평화는 목표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통일은 평화를 지향해야 하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 역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김귀옥 2006, 69).

최근에는 ‘통일평화’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평화통일’이라는 용어와 대비되기도 하는 통일평화에 대한 논의는 평화를 통일의 전 단계 또는 통일의 최종 단계로만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통일을 완성한 이후에도 통일국가가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한다(홍용표 2011).

김병로(2017)는 통일평화를 “통일을 통해 미래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행위, 즉 평화조성(peace-making)과 평화구축(peace-building) 활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통일평화에서 평화는 “문화적, 구조적 평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적극적인 평화의 의미”가 강하다(서보혁·정옥식 2016). 이러한 통일평화 개념은 기존의 ‘평화 → 통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특히 평화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다.⁷⁾ 하지만 이 개념 역시 분단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사회의 평화 논의가 군사적 긴장 완화 또는 전쟁 방지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는 전쟁의 경험, 북한 위협의 상시화, 국제·국내 정치적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6.25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사회에는 전쟁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전쟁으로 남과 북의 상호불신과 적개심이 내재화되었으며, 이는 남북한에서 모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둘째, 북한은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각종 도발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첨예화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주변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분단 상황과 어우러져 한반도에 투영되어 왔다. 냉전기에는 미·소의 군사적 대결이 한반도의 긴장에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는 미·중관계가 한반도 평화 문제와 긴밀히 얽혀 있다.

넷째, 국내에서의 정치적·이념적 갈등 또한 평화 문제에 대한 균형 있

7) 한국 학계에서 평화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진 것도 이러한 흐름에 기여하였다. 하여선(2002), 구갑우(2007), 서보혁·정옥식(2016) 등 참조.

는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이념적 성향 때문에,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 군사조치의 위협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이분법적 논리와 대립으로 연결되어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의 평화 문제에 대한 편협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냉전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⁸⁾ 남북의 분단과 대립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체제와 맞물려 한반도에 냉전구조를 형성하였고, 이는 다시 남북한 사회 내부에 대립과 적대적 감정을 확산시키며 냉전문화로 고착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냉전문화의 중심축은 ‘반공주의’라고 할 수 있다. 6.25 전쟁의 경험과 이후 지속된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위협의 확대·재생산 등으로 인해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은 극도로 심화되었다. 아울러 6.25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적 대립과 한반도 차원에서의 남북대립의 상호작용으로 그 결속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적’으로서 북한의 이미지와 함께 ‘친구’로서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다른 한편 친미주의의 형성과 확대 과정은 ‘반미주의’를 형성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권위주의 정부들이 한미동맹과 친미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반작용 등으로 인해 반미주의가 민주화 운동세력들의 주요한 운동이슈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반미주의는 1990년대의 냉전의 종식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특히 2002년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중화되어 갔다(조한범 외 2004, 52-59; 김귀옥 2006, 76-81). 또한 반미의식의 확산은 ‘종미’ 논쟁을 불러왔고, 이는 ‘종북’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냉전문화를 뒷받침해온 ‘반공, 친미, 종북, 반미’ 의식은 단순히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에 대한 이해나 동조를 배척하고 적개심을 표현하는 배타적 가치로

8) 김귀옥(2006, 74-75)은 냉전문화를 세계적 냉전과 한반도 분단구조에 의해 형성된 구조적 폭력에 기초한 문화로 정의하고, 이를 평화문화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냉전문화는 한반도 문제와 미국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 관용과 이해보다는 이분법적 갈등과 불신의 가치를 확대시켜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논쟁,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작가 한강의 기고문에 대한 논란, 그리고 작곡가 현제명의 친일·친미 논쟁을 주요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⁹⁾

첫째, 분단 상황에 치중한 평화 인식의 문제점은 인권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난다.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평화도 곧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평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바로 평화문화 개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논의는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기에도 정치적 갈등이 연계되어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인권이라는 국제규범을 받아들일도록 노력해야 하며,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통해 통일의 대상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으로 인식해 분쟁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체제위협을 의식해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 당국에게 인권개선을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호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은 처음 제안된 지 11년 만인 2016년에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마저도 차분한 협의를 통한 입장 조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른 찬반 대립만이 거듭

9) 첫째와 둘째 사례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협한 인식과 이분법적 논리에 기인한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 번째는 표면적으로 북한 또는 미국과 관련 없는 문제가 결국 친미, 중북 논란으로 확산되는 사례로 냉전문화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되다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적당한 절충으로 마무리되었다. 양 진영은 보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보편적 가치 차원이 아니라 당장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배타적 주장을 펼친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2017년 가을, 작가 한강의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기고문(“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몹서리 친다”)을 둘러싼 논쟁이다(Han Kang 17/10/17). 한강의 기고문은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전쟁의 경험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 당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 폭력과 인간성의 문제 등 평화 문제와 관련하여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고문에 대해서 보수 언론과 논객들은 핵무기 개발로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북한을 먼저 나무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록 많은 한국인들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전적 발언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진 않지만, 핵도발로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킨 북한 행동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¹⁰⁾ 이에 대해 진보 매체들은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행보와 적절치 못한 언행에도 큰 책임이 있고, 핵심은 전쟁을 그만두자는 내용이라며 한강의 주장을 옹호하였다. 이후 한강의 기고문에 대한 논쟁은 6.25전쟁을 대리전(proxy war)으로 표현한 문제로 비화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대립으로 이어졌다. 일부 보수인사는 한강이 ‘6.25전쟁은 대리전’이었다고 말한 것은 중북·좌파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으며, 한국문단 자체가 좌편향되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 논객들은 한강을 비판하는 것은 친미·수구·보수파의 트집 잡기이며, 북한에 대한 혐오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온라인상

10) 한강은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이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제목이 상징하듯이 미국에 대한 우려가 기고문의 초점인 것은 사실이다.

의 댓글에는 ‘빨갱이’, ‘수구 꼴통’ 등 더욱 거칠고 인신공격적인 표현들이 넘쳐났다.¹¹⁾

마지막으로 미국·북한에 대한 인식 또는 평화·안보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음악가 현제명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역사의 질곡과 그 속에서 자라난 냉전문화가 우리 일상에 내면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보다 심각한 사례이다. 일제 식민지배하의 1931년 현제명이 작사·작곡한 ‘희망의 나라로’는 해방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표적 노래로 널리 불려 왔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언제나 즐겨 부르는 민족의 노래, ‘희망의 나라로 …’가 그리는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가득한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였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취임선서 후 이 노래가 축하곡으로 불렸다. 그런데 현제명의 일제 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나자 그는 2002년 발표된 친일파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희망의 나라’는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일본이 추진한 대동아 공영 건설을 의미한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물론 다수 의견은 비록 현제명이 친일 행위를 했지만, 이 노래는 일제 식민치하의 서글프고 억압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제명에 대한 논란은 친미, 친북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일부에서는 현제명이 미국 유학과 출신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가 해방 후 한국 음악계에 ‘친일-친미-반공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친북좌파’들이 근대 한국음악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민족 음악인들을 친일, 친미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서우석 2011; 한겨레 10/08/24).¹²⁾

현제명의 친일 여부와 상관없이 이 노래에 담긴 “자유, 평등, 평화, 행

11) 예를 들어 조영기(2017), 조선일보(17/10/10), 오마이뉴스(17/10/11), 경향신문(17/10/13) 등 참조.

12) 관련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료는 다음을 참조. “홍난파와 현제명, 그리고 봉선화와 선구자의 수난,” <https://blog.naver.com/bbae46/80019667450>(최종검색일: 2017/09/28).

복”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희망이며, 또한 평화문화에서 중요시하는 인간다운 삶, 지속가능한 발전, 민주적 가치 등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사회는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건설적 대화보다는 흑백논리에 기초한 배타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평화를 정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한국의 평화문화 지수를 측정한 연구 결과도 한국의 평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 한국에서 『세계평화문화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UN과 UNESCO의 평화문화 개념을 활용하여 평화문화를 ① 정치·군사 부문과 ② 사회·경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다시 ③ 구조적 측면과 ④ 행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4개의 범주를 만들고, 각종 국제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74개국에 대한 평화문화지수를 측정한 것이다. 평화문화 수준을 지수화하여 측정한 세계 최초의 시도인 이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평화롭지 않은 나라들은 정치·군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평화 수준이 모두 낮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평화문화 개념이 제시하듯이, 평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쟁의 부재와 같은 대외적·군사적 차원의 평화 확보 못지않게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평등, 환경보호 등 “국내의 조건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체 평화 수준이 74개국 중 44위에 그쳤는데, 정치·군사적 부문(36위)보다 사회·경제적 부문(53위)에서의 순위가 오히려 낮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이것이 평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문화일보 평화포럼 평화문화위원회 2000). 2001년부터는 『세계평화문화지수』 대신 몇 가지 개념과 방법론을 변화시킨 『세계평화지수』가 발표되고 있는데, 2009년 및 2015년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사회적 배제나 차별 영역에서의 평화수준이 삶의 질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세계평화포럼 2009, 2015).¹³⁾

13) 세계평화문화지수 분석 작업을 주도한 연구팀은 애초 UNESCO 등과 협력하여 평화 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려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실제 협의 과정에서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시급한 것은 현시적 위협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편-내편을 구분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못함은 물론 적으로까지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사회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핵 문제라는 외부적 위협이 해소되더라도 내부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대립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일을 이루기도 어렵겠지만, 혹시 이루어지더라도 또 다시 편을 가르고 대결하는 불안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에 평화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평화문화의 개념과 특징은 우리사회의 단편적 평화 논쟁 문제를 극복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화문화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쟁의 고통(scourage of war)”과 “전쟁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평화문화의 확산은 6.25전쟁의 아픔과 여기서 비롯되어 구조적 폭력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냉전문화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분단과 냉전문화의 지속으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은 우리사회에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자기 중심적’ 가치를 퍼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 초월적’ 가치를 강조하는 평화문화 개념은 친미·반미와 같이 갈등과 대결을 조장하는 가치 대신 관용·이해·협력·연대 등과 같은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사회에 보다 조화로운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화문화는 단순히 군사적 수단으로 전쟁을 막는 차원을 넘어, UN의 ‘실행계획’에 담겨 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평화

의 문제, 그리고 평화와 문화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의 문제 등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2001년부터는 개념과 방법론을 변화시키고, 조사 대상도 확대한 『세계 평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다(세계평화포럼 2001, 2015). 이 사례는 평화문화의 유용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1년부터 발표된 조사 결과에는 사회, 경제적 평화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조사 항목과 대상 국가 수가 다르고 한국과 관련한 분석내용과 통계자료의 발표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2000년 조사와 직접 비교하거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의 기반을 쌓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분단과 군사적·이념적 대립의 상
황으로 편협해진 평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의 차원에서도 유용성이 있다.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
협하는 적이자, 교류협력과 통일의 대상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에는 민·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활동과 시민운동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평화문화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환경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평화문화를 통한 새로운 평화비전의 수립과 건설적 평화담론의 형성
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는 힘에 기초한 안보 유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의 해결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사회에 퍼져 있는 비평화적 가치를 평화적 가치로 전
화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평화문화 옹호자들도 이상적인 평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드리베
라(de Rivera 2009)는 보다 평화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폭력적 성향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힘에 기초한 ‘평화 유지’의 필요성을 인
정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접근을 통한 ‘평화 만들기’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IV. 나오는 글

평화문화는 “밖으로부터 주어질 수 없으며, 사람들 자신의 믿음과 행동
에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이다(UNESCO 1995, 16). 이를 위해 UN은 국가는
물론 시민사회가 생활권, 지역, 국가 차원에서 평화문화와 관련한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UN은 앞에서 살
펴보았듯이, 평화 가치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 인권
에 대한 존중, 양성평등의 보장, 민주적 참여의 확대, 다양한 사회집단 사

이의 이해·관용·연대 촉진, 참여적 소통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지원, 국제적 평화와 안보 증진 등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평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평화 문제는 주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유지 차원과 법적·제도적 접근을 통한 평화 구축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이에 반해 평화문화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평화연구의 접근법을 수용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행위 양식 변화를 통해 폭력과 전쟁문화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평화의 실현에 관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조민 2000, 11). 특히 평화문화는 이해·협력·관용 등과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사람들의 평화 지향적 행동을 이끌어 내고,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포용적 정체성을 육성함으로써 배타적·폭력적 행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에 주목하며 개인의 생활 차원에서부터 평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평화문화 개념은 분단 상황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실성이 있다. 우리사회에는 전쟁의 기억과 상처, 전쟁 이후에도 지속된 남북 간 대립,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잉태된 냉전문화로 인해 뿌리 깊은 갈등과 비타협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문화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구도와 긴장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설사 군사적 대결이 해소되고 평화체제가 수립된다고 해도 진정한 평화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개개인과 사회 차원에서부터 화해와 협력 가치를 확산하고 이에 기초해 평화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의 평화문화 증진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평화적 문제해결의 관행을 만들어가고 보다 안정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실상 한국에서 평화문화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시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다 활발한 학문적·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평화문화론자들도 인정하였듯이 평화문

화의 확산은 매우 방대하고 다차원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평화문화 개념의 응집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한국에서 평화문화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문화 논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타적, 갈등적 대립 사례와 그러한 문제의 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이론과 현실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인 평화운동 등을 통해 평화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평화문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준비 및 이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평화문화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UNESCO 1996; Power 2014; Guetta 2013). 반면 이제까지 한국에서의 평화 관련 교육은 정부 주도의 안보교육과 통일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다. 최근 민간 차원에서 평화교육이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평화문화를 위한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은 물론 기성세대에게 평화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초투고일 : 2018. 5. 4

논문심사일 : 2018. 5. 16

게재확정일 : 2018. 5. 30

참고문헌

- 구갑우. 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 김귀옥. 2006.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문화, 시민사회.”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67-102.
- 김명섭. 2002.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 김병로. 2017. 『다시 통일을 꿈꾸다: 한반도 미래전략과 ‘평화연합’ 구상』. 서울: 모시는 사람들.
- 문화일보 평화포럼 평화문화위원회. 2000. 『세계평화문화지수 2000』. 서울: 문화일보 평화포럼.
- 민병원. 2006.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코펜하겐 학파, 안보문제화, 그리고 국제정치이론.”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 5: 세계정치와 동아시아의 안보구상』. 고양: 인간사랑.
- 변종현. 2017.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 비전: 평화문화 확산의 관점에서.” 『평화학연구』 제18권 3호, 27-47.
- 서보혁·정육식. 2016.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 사람들.
- 서우석. 2011. “현제명의 삶과 한국 음악의 어제와 오늘.”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보』 제17호, 15-21.
- 세계평화포럼. 2001. 『세계평화지수』. 서울: 세계평화포럼.
- _____. 2009. 『세계평화지수』. 서울: 세계평화포럼.
- _____. 2015. 『세계평화지수』. 서울: 세계평화포럼.
- 이문영. 2013. “평화의 문화, 문화의 평화: ‘평화인문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문화.” 『사이間SAI』 제14호, 599-630.
- 이혜정·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1-37.
- 전성훈·황병덕·조민·미즈모토 카즈미·서보혁. 2005.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_____. 2006.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지도동체 활성화 방안』.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전 용. 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25-49.
- 조 민. 2000.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조영기. 2017. “‘6.25는 대리전’ 주장은 從北의 뿌리.” 『문화일보』(10월 13일).
- 조한범 외. 2004.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최관경. 2004. “평화와 평화교육.” 『교육사상연구』 제14집, 1-27.

- 통일교육원. 2017.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 하영선. 2002. “근대 한국의 평화 개념의 도입사.”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 홍용표. 2002.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한국 정치학회보』 제36집 4호, 121-139.
- _____. 2011. “통일한국을 위한 비전.” 최진욱 외.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Galtung, Johan 저. 강종일 외 역.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 경향신문. 2017. “소설가 한강 NYT 기고문 두고 정치공세 벌이는 야당.” 『경향신문』(10월 1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32131015(최종검색일: 2017/10/23).
- 오마이뉴스. 2017. “‘평화’ 외친 한강 기고마저 트집 잡는 <조선일보>.” 『오마이뉴스』(10월 11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6669(최종검색일: 2017/10/23).
- 인터넷 자료. “홍난파와 현제명, 그리고 봉선화와 선구자의 수난.” <https://blog.naver.com/bbae46/80019667450>(최종검색일: 2017/09/28).
- 조선일보. 2017.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 『조선일보』(10월 1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9/2017100901714.html(최종검색일: 2017/10/16).
- 한겨레. 2010. “선구자, 대동아 공여에 바쳐진 친일노래.” 『한겨레』(8월 24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36502.html>(최종검색일: 2017/10/12).
- Adams, David. 2000. “Toward a Global Movement for a Cultural Peace.” *Peace and Conflict* 6(3): 259-266.
- _____. 2003. “Early History of the Culture of Peace: A Personal Memoire.” <http://www.culture-of-peace.info/history/introduction.html>(최종검색일: 2018/04/24).
- Basabe, Nekane, and Jose Valencia. 2007. “Culture of Peace: Sociostructural Dimensions, Cultural Values, and Emotional Climate.” *Journal of Social Issues* 63(2): 405-419.
- Bjarnegard, Elin. 2015. “Addressing Fear and Injustice to Create an East Asian Culture of Peace.” *Global Asia* 10(4): 68-78.

- Boulding, Elise. 2000. *Cultures of Peace: The Hidden Side of History*.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 Boulding, Kenneth E. 1978. *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uzan, Barry. 1991. *People, States, &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 Coleman, Peter T. 2012. "Conclusion: The Essence of Peace? Toward a Comprehensive and Parsimonious Model of Sustainable Peace." Peter T. Coleman & Morton Deutsch eds. *Psychological Components of Sustainable Peace*. New York: Springer.
- Culture of Peace. 1986. "Seville Statement on Violence." <http://www.culture-of-peace.info/vita/2011/seville2011.pdf>(최종검색일: 2018/05/02).
- De Rivera, Joseph. 2004. "Assessing the Basis for a Culture of Peace in Contemporary Societ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41(5): 531-548.
- De Rivera, Joseph eds. 2009. *Handbook on Building Culture of Peace*. New York: Springer.
- Dietrich, Wolfgang ed. 2011.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Peace Studies: A Cultural Perspectiv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Fry, Douglas P., and Marta Miklikowska. 2012. "Culture of Peace." Peter T. Coleman and Morton Deutsch eds. *Psychological Components of Sustainable Peace*. New York: Springer.
- Guetta, Silvia. 2003. "From peace education to culture of peace: context and issues." *Studi Sulla Formazione* (1): 167-179.
- Han, Kang. 2017. "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hudders." *New York Times*, October 17.
- Pollock, Philip, Stuart Lilie, and Elliot Vittes. 1993. "Hard Issues, Core Values and Vertical Constraint: The Case of Nuclear Powe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1): 29-50.
- Power, Colin. 2014. "Building a Culture of Peace to Replace the Culture of War." *Social Alternatives* 33(4): 47-51.
- Richerson, Peter J., and Robert Boyd. 2005. *Not by Genes Alone: How Culture Transformed Human 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ummy, Ralph. 2009. "The Paradigm Challenge of Political Science: Delegitimizing the Recourse to Violence." Joseph de Rivera ed. *Handbook on Building Culture of Peace*. New York: Springer.
- UN. 1999a. "Declaration on a Culture of Peace(A/RES/53/243A)." <http://>

- www.un-documents.net/a53r243a.htm(최종검색일: 2017/10/02).
- _____. 1999b. “Programme of Action on a Culture of Peace(A/RES/53/243B).” <http://www.un-documents.net/a53r243b.htm>(최종검색일: 2017/10/02).
- UNDP.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NESCO. 1989. “Yamoussoukro Declaration on Peace in the Minds of Men,” http://www.unesco.org/education/pdf/YAMOU_E.PDF(최종검색일: 2017/10/02).
- _____. 1995. *UNESCO and a Culture of Peace: Promoting a Global Movement*. Paris: UNESCO.
- _____. 1996. *From a Culture of Violence to a Culture of Peace*. Paris: UNESCO.
- Website of David Adams. “Global Movement for a Culture of Peace.” <http://www.culture-of-peace.info>(최종검색일: 2018/04/02).

A “Culture of Peace” for Sustainable Peace: Implications and Tasks in South Korea

Hong, Yong-Pyo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concept of “culture of peace,” examine the problems of peace discourse in South Korea, and apply peace culture to Korea.

The culture of peace aims at promoting peace through fostering peace education, human right,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value of tolerance and solidari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Particularly, the peace culture concept tries to build peace by inducing change in value and identity.

In Korea, a narrow perception on peace and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have been maintained because of the division and subsequent formation of the ‘culture of cold war.’ Accordingly, the features of peace culture have usefulness in solving the problems in Korea. First, the peace culture may help curing the pain from the culture of cold war which has been a cause of structural violence. Second, it will contribute to recovering exclusive relationships by encouraging the value of understanding and harmonious identity. Third,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peace will broaden narrow perspective on peace among the Koreans. Finally, the culture of peace will encourag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for peaceful inter-Korean relationships.

▀ **Keywords:** culture of peace, value, identity, peace in Korea, culture of cold war